

"우리를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국무조정실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3703-3926 / 전송 02)732-7155
규제개혁1심의관실 과 장 서기관 정 현 용

문서번호 국무규제05090-1036

시행일자 2001.6.25. ()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규제개혁담당관

보존기간	1	실 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개	김현용	김현용
조 정 관	관		
심 의 관	관		
과 장	과장		
기 안	정 현 용	협조	
심 사 자	김현용	심 사 일	2009.6.25

제 목 「정부규제개혁업무 평가지침」 시달(국무총리 지시 2001 - 20호)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국민의 정부 4개년간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향후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반영코자 「정부규제개혁업무 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부처에서는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부 규제개혁업무 평가지침 1부. 끝.

국무총리

수신처 : 가 23, 24, 26~29, 31, 41~86

國務總理 指示
第2001 - 號

政府 規制改革業務 評價指針

2001. 6

國 務 調 整 室
規制改革調整官室

< 目 次 >

I . 評價目的	1
II . 評價計劃(案)	1
III . 作業推進節次 및 措置必要事項.....	4
IV . 推進日程.....	5

< 첨부 1 > 평가항목 · 지표 및 배점

< 첨부 2 >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 첨부 3 > 기관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양식

< 첨부 4 > 전문가평가를 위한 제출요구자료

I. 評價目的

- 국민의 정부 4개년간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평가함으로써 향후 규제개혁 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

II. 評價計劃(案)

1. 評價對象 機關

-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2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 評價對象 實績

- '98.4월~2001.8월 까지의 기관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3. 主要 評價內容

- 규제개혁 추진체계
 - 기관 내 규제개혁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상황
 - 기관장 및 소속 공무원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등
- 규제개혁안의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
 - 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합목적성, 효율성 등)
 - 일선기관에 대한 규제개혁안 통보의 신속성, 대국민 홍보노력 등
- 자체적인 규제개혁평가 및 개선노력
 -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 파악노력
 - 규제개혁 집행상태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개선노력 등

※ 자세한 평가항목·지표 및 평가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4. 評價 推進體系

< 中央行政機關 >

- 규제개혁 평가지침을 수립,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
 -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 등을 결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부처에 사전 통보
 - 동 평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부처 자체적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 중심의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고, 자체평가단에서 1차 평가 실시
 - 부처별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종합평가 실시
 - 규개위 민간위원,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정부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 부처별 자체평가결과를 심사·조정
- ※ 규제개혁 추진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수시 현장 점검 실시

< 地方自治團體 >

- 중앙행정기관 평가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평가지침을 수립,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도록 중앙행정기관 평가지침을 보완
 - 일선 공무원의 규제집행 행태·관행을 평가요소에 포함, 총 배점의 20%내외로 반영
 -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 산자부·행자부·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 강구

5. 評價 時期

- 기관 자체 평가는 6월말 기준, 8월말까지 평가종결

6. 評價結果 活用

- 종합평가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후 국무회의 보고 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
- 수범부처 및 사례에 대하여는 기관(개인) 포상 등 실시
- 우수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
- 평가 결과 지적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 개선토록 하고 2002년도 규제 개혁 업무추진계획에 개선내용을 반영토록 조치

Ⅲ. 作業推進節次 및 措置必要事項

○ 기관별 자체 평가작업단 구성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규제개혁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기관별로 평가작업단을 구성
- 평가작업단은 소관규제수 및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반드시 과반수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

※ 부처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시 위원명단도 함께 제출

○ 기관별 자체평가 실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첨부자료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참조, 평가 지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 (첨부 1·2·3)

※ 평가항목 중 ‘규제개혁안의 결정’ 분야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문가 평가로 갈음

- 자체평가지시, 규제개혁조정관실 해당부처 담당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외부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

※ 부처별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실화정도도 평가요소에 포함, 반영

- 자체평가보고서와는 별도로 전문가 평가를 위한 요구자료도 함께 제출(첨부 4)

○ 규제개혁평가단 구성 및 현장점검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

-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 세부평가실시(담당자 면담, 설문, 서베이 등 활용)
- 각 부처 현장점검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 중앙·지방간 교차점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

IV. 推進日程

- 2001. 6월중순 : 2001년도 정부 규제개혁 평가지침(안) 마련
- 2001. 6월중순 : 동 평가지침 확정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각 부처 시달 (국무총리 지시)
- 2001. 6월하순 :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지침(안)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시달
- 2001. 9월하순 : 부처별 자체평가결과 접수, 규제개혁평가단 구성 및 현장점검
- 2001. 10월하순 : 규제개혁종합 평가완료
- 2002. 4월중순 : 우수부처(사례) 등에 대한 포상 등 실시

評價項目・指標 및 配點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규제개혁 추진체계 (22)	1. 부처내 규제개혁 추진 기구의 설치와 운영 (6)	가. 자체 규제개혁 추진기구 구축여부 나. 자체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다. 위원구성의 적정성과 전문성 라.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1 1 2 2
	2. 기관장 및 소속 공무원의 규제개혁의지(10)	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방침 및 정책의 준수 여부 나. 부처내 장기 규제개혁계획의 존재와 적정성 다. 기관장의 규제개혁 비전과 개혁의지 라. 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2 2 3 3
	3. 규제개혁을 위한 분석과 기획(6)	가. 규제영향분석의 준비상태 나. 규제영향분석의 실시수준	3 3
규제개혁안의 결정 (25)	1. 규제정책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9)	가. 규제정책의 목적적합성 나. 규제정책의 목적달성도의 평가성 다. 규제정책의 장기적 효율성 라. 규제정책의 단기적 효율성	3 2 2 2
	2. 규제수단의 품질(10)	가. 규제수단의 유연성 나. 규제수단의 투명성 다. 규제수단의 행정적 효율성 라. 규제수단의 객관성	3 3 2 2
	3. 규제수단의 준수 친화성(6)	가. 규제수단의 서술의 단순성 나. 규제수단의 보편성 다. 규제수단의 피규제자 편의성	2 2 2
규제개혁안의 집행 (23점)	1. 규제개혁안의 집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11)	가. 규제개혁관련 법안의 신속한 공식화 나. 규제개혁관련 하위법령의 적시 처리수준 다. 유사행정규제 정비실적 라. 법령미근거 규제 정비실적	2 2 4 3
	2. 규제개혁안의 집행을 위한 행정체제의 재설계(6)	가. 일선기관에 대한 규제개혁안 통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나. 규제개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조정노력	3 3
	3. 규제개혁안의 집행을 위한 대국민 홍보(6)	가. 홍보물 게시 및 전자적 정보공개 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보도실적	3 3
자체적인 규제개혁 평가 및 개선노력 (30점)	1.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 파악 노력 (9)	가. 국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 나. 규제개혁 관련 국민제안 처리실적 다.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 실적	4 3 2
	2. 규제개혁 집행상태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개선노력(5)	가. 규제개혁 집행상황 평가 실적 나.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3 2
	3.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자구노력의 효과성(7)	가. 규제총량관리를 위한 신설강화규제 억제 노력 나. 핵심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정비 실적 다. 지식정보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 라. 창의적 업무발굴 등 타부처의 수범이 되는 정도	2 2 1 2
	4. 기존규제 정비실적(9)	가. 규제등록 및 관리실적 나. 규제폐지율 다. 규제개선을	3 3 3

指標別 評價內容

< 규제개혁 추진체계 >

○ 부처내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설치와 운영

- 자체 규제개혁추진기구 구축여부: 규제개혁과 관련되어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하고 있는가? 그 기구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는 무엇인가?
- 자체 규제개혁추진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 자체 규제개혁추진기구가 부처의 입장등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 의사결정하고 있는가?(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실무 수정비율로 측정)
- 위원구성의 적정성과 전문성: 위원들이 부처의 규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또한 위원들이 부처의 입장에서 초연하여 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민간인 위원의 구성비율은 충분한가?
-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 위원회 개최시 대면회의를 활용하여 위원회의 개최가 정례화되어 있는가?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는가?

○ 기관장 및 소속 공무원의 규제개혁의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방침 및 정책의 준수 여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핵심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정비에 어느 정도 적극 참여하였는가?
- 기관내 장기 규제개혁계획의 존재와 적정성 : 부처별 소관업무 및 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장기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가? 장기적인 분야별 규제개혁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수행하였는가?

- 기관장의 규제개혁 비전과 개혁의지: 규제개혁에 대하여 기관장이 충분한 관심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기관장의 이러한 관심과 비전이 조직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 관내에 장의 개혁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각종 기관내 회의시 강조발언내용, 강연·언론 등 주제 활용 실적 등)?
- 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규제개혁 관련 교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직장교육 실시 횟수 등급산정)? 담당공무원들이 규제개혁적인 제안을 건의하는 사례 회수?

○ 규제개혁을 위한 분석과 기획

- 규제영향분석의 준비상태: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준비활동(직원교육, 전문기관지정등)이 충분한가? 부처실무자가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규제영향분석에 외부 전문가들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활용비율로 등급산정)?
- 규제영향분석의 실시수준: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성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특히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성실히 평가하여 측정하고 있는가?

< 규제개혁안의 결정과정 (부처 자체평가 생략, 규제정책평가서 제출) >

○ 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 규제정책의 목적적합성: 규제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규제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 규제정책의 목적달성도의 평가성: 규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를 확보하고 있는가?, 규제정책이 그 목적을 실현하였거나 또는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는가? 그 객관성은 어느 정도인가?

- 규제정책의 단기적 효율성: 규제정책이 단기적으로 볼 때 주어진 정책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보다 저비용의 방법은 없는가?
- 규제정책의 장기적 효율성: 규제수단이 국가경제사회의 역동적 발전, 즉 민간에 의한 혁신이나 연구개발 등을 자극하는 정도는 어느 수준인가? 규제수단이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 규제수단의 품질

- 규제수단의 유연성: 규제의 내용과 형식이 얼마나 신축적인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편의나 필요에 따라서 규제준수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 정책환경이나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기존의 규제정책이 피규제자의 큰 저항이나 부담없이 유연하게 주어진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
- 규제수단의 투명성: 규제수단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내리는 유권해석이나 판단들에 대하여 제3자가 충분히 관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충분한가?
- 규제수단의 행정적 효율성: 규제수단에 의해 야기되는 행정적 부담이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불필요한 집행비용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규제집행을 위해 과도한 정보수요가 존재하지는 않은가?
- 규제수단의 객관성: 규제의 기준과 절차가 누가 보아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한가?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되어 있는가? 단서조항과 예외가 많고 절차와 기준이 복잡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는 없는가?

○ 규제수단의 준수친화성

- 규제수단 서술의 단순성: 규제수단이 피규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논리로 묘사되어 있는가?
오해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는 없는가?, 절차는 단순명료한가?

- 규제수단의 보편성: 채택된 규제수단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적인 설득력을 규제수단이 갖추고 있는가? 규제수단의 세부적 방식과 내용들이 여타의 사회적 규범과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가?
- 규제수단의 피규제자 편의성: 규제수단에 의해 야기되는 집행절차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가? 불필요한 행위나 서식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규제수단의 수준은 바람직한 정도인가?

< 규제개혁안의 집행과정 >

○ 규제개혁안의 집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

-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공식화: 국회에 제출한 규제개혁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당정협의등)을 기울였는가? 그 결과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되었는가(여타 기관이나 부처내 비규제 법안과 비교)?
- 규제개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적시 처리수준: 개정 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조치가 신속하게 구현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 결과 하위법령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가(여타 기관이나 부처내 비규제 안전과 비교)?
-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실적 : 하위규정(지침·내규 등) 및 유사행정규제 발굴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발굴을 위하여 조직적이고 빈틈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정비작업반 구성, 민간인참여정도, 전문성 등)? 발굴된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의 처리수준은 어떠한가(처리비율로 등급산정)?
- 법령미근거 규제 정비실적: 법령미근거 규제 발굴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 법령미근거 규제를 계속 운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이행 실태 점검시 지적된 사례가 있는가? 발굴된 법령미근거 규제의 처리수준은 어떠한가(처리비율로 등급산정)?

○ 규제개혁안의 집행을 위한 행정체제의 재설계

- 일선기관에 대한 규제개혁안 통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일선기관들에 대한 규제개혁안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선기관으로부터 규제개혁안에 대한 환류를 도모하는 노력은 충분한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차확인

- 규제개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조정 노력 : 규제개혁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절감이나 증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는가(김포시청 허가과 신설 등)?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요예산이나 인력의 증가 필요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규제개혁과 여타 개혁 과제(전자정부, 리엔지니어링)와의 연계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가?

○ 규제개혁안의 집행을 위한 대국민 홍보

- 홍보물 게시 및 전자적 정보공개: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충분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여타 기관과 비교)?
현재 부처의 홍보방법은 효과적인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홈페이지내 규제신고센터 구축여부 등)?
-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보도실적: 광고나 보도자료 배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여타 기관과 비교)? 부처의 규제개혁에 대한 언론의 평가 및 비판적 보도내용에 대한 대응노력은 어떠한가?

< 자체적인 규제개혁 평가 및 개선노력 >

○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 파악 노력

- 국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 국민들이 부처의 규제로부터 어떠한 부담을 안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가?,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면 그 방법의 효과성은 기대한 수준만큼 높은가?
- 규제개혁 관련 국민제안 처리실적: 규제개혁과 관련된 국민제안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고 있는가? 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한 국민제안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접수된 제안들이 적시에 처리되고 있는가(처리비율로 등급산정)?

○ 규제개혁 집행상태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개선노력

- 규제개혁 집행상황 평가실적: 부처가 시행한 규제개혁이 과연 의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실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평가는 최소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 또 자체적인 점검 작업은 주기적인 일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여타 기관이나 부처내 비규제 사안과 비교)?
-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자체적으로 수행한 규제개혁 집행상태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부처의 규제개혁의 전략이나 접근방법 및 규제수단의 상세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한 실적이 있는가(부처자체 점검등)? 그러한 수정이나 보완은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에 따를 것인가?

○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자구노력의 효과성

- 규제총량관리를 위한 신설강화규제 억제노력: 1998년 4월 이후 신설 규제의 숫자는? 1998년 4월 이후 강화규제의 숫자는? 2001년 6월 현재 부처소관 총단위규제수 대비 신설강화규제 수의 비율은?
- 핵심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정비 실적: 1998년 4월 이후 부처가 추진한 핵심 규제개혁과제의 수는?
2001년 6월 현재까지 핵심 규제개혁과제의 처리비율과 가중치를 고려한 집행실적의 달성도는?
- 지식정보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 지식정보화에 대한 부처의 관심은 충분한 편인가?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개요와 집행실적의 달성도는?
- 창의적 업무발굴 및 타 부처의 수범이 되는 정도: 규제개혁을 위한 창의적 업무의 발굴개요와 집행실적의 달성도는? 창의적 업무가 타 부처에 충분히 전파되고 있는가?

○ 기존규제 정비실적

- 규제등록 및 관리실적: 누락규제의 발굴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규제등록시 관련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등록규제 변동시 수정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규제폐지율: 1998년 4월 기준 총등록규제 대비 2001년 6월까지의 규제폐지 비율은?
- 규제개선율: 1998년 4월 기준 총등록규제 대비 2001년 6월까지의 규제개선 비율은?

○ 평가기준

區分	評 價 基 準
수	1)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90%이상 수준) 2) 특별한 노력의 결과로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
우	1)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80%이상 수준) 2) 상당한 성과를 산출하였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미	1)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70%이상 수준) 2) 주어진 여건 아래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양	1)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미흡한 경우(60%이상 수준) 2) 노력정도가 미흡하여 다소 미흡한 실적을 산출한 경우

< 첨 부 3 >

< 1998 ~ 2001年度 >
規制改革 成果 自體評價 報告書

2001. 9

○ ○ 部

(1) 규제개혁추진체계

주요실적

- (1)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평가지표별로 정리
- (2)

평가의견 :

- (1) 자체적인 등급산정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별 평가지표별로 정리
- (2)

(2) 규제개혁안의 집행

주요실적

- (1)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평가지표별로 정리
- (2)

평가의견 :

- (1) 자체적인 등급산정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별 평가지표별로 정리
- (2)

(3) 자체적인 규제개혁 평가 및 개선노력

주요실적


- (1)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평가지표별로 정리
- (2)

평가의견 :

- (1) 자체적인 등급산정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별 평가지표별로 정리
- (2)

(4) 규제개혁안의 결정과정에 대한 전문가평가를 위한 제출자료

<규제정책 평가서 >

규제정책명				평가서 작성자	()
부처별			부문별		처리기관별
법 적 근 거	법률				
	대통령령				
	총리/부령				
	고시 등				
규제정책의 목적 및 내용					
규제정책의 부처내 중요도		/100		규제정책의 거시적 중요도	
1998.4 이후에 시행된 주요한 규제개혁 조치내용					

※ 규제정책 평가서 작성요령

- ① 규제정책명: 평가서를 작성하는 각 부처에서 규제정책명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 평가서에 결여된 규제정책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규제정책명을 결정(관련된 단위 규제사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이어야 함)
- ② 평가서 작성자: 평가서 작성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기
- ③ 부문별: 규제등록서에 등록된 규제사무의 부문을 표기, 복수의 규제사무가 서로 부문이 다른 경우에는 모두 표기
- ④ 처리기관별: 규제등록서에 등록된 규제사무의 처리기관을 표기, 복수의 규제사무가 서로 처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모두 표기
- ⑤ 법적근거: 가능한한 하위수준의 법령까지 표기
- ⑥ 규제정책의 목적 및 내용: 간략하게 기술
- ⑦ 규제정책의 부처내 중요도: 해당 규제정책이 피평가 부처의 모든 규제정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지를 평가. 상대평가이므로 한 부처의 규제정책의 부처내 중요도의 총합은 100점이 되도록 중요도를 배분.
- ⑧ 규제정책의 거시적 중요도: 규제정책의 국민경제사회적 중요성을 평가. 자체평가에서는 표기하지 않음.
- ⑨ 1998.4이후 시행된 주요한 개혁조치내역: 1998년 현 정부 출범이래 해당 규제정책에 대한 철폐, 완화, 합리화 등과 같은 규제개혁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

※ 구체적인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지난해 작성한 예비평가 보고서 참조

專門家 評價를 위한 提出要求資料

평가지표	제출해야 할 자료
가. 자체 규제개혁 추진기구 구축여부 나. 자체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다. 위원구성의 적정성과 전문성 라.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회의록(또는 회의결과 정리자료) 위원명단 및 경력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방침 및 정책의 준수 여부 나. 부처내 장기 규제개혁계획의 존재와 적정성 다. 기관장의 규제개혁 비전과 개혁의지 라. 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규제개혁위원회 점검시 지적사항 목록 관련 기획안 관련 강연실적 및 원고, 기타 회의시 강조실적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제교육 횟수와 이수자 규모
가. 규제영향분석의 준비상태 나. 규제영향분석의 실시수준	관련 자료 대표적인 규제영향분석서 3부
가. 규제정책의 목적적합성 나. 규제정책의 목적달성도의 평가성 다. 규제정책의 단기적 효율성 라. 규제정책의 장기적 효율성	규제정책별 평가서로 대치
가. 규제수단의 유연성 나. 규제수단의 투명성 다. 규제수단의 행정적 효율성 라. 규제수단의 객관성	규제정책별 평가서로 대치
가. 규제수단의 서술의 단순성 나. 규제수단의 보편성 다. 규제수단의 피규제자 편의성	규제정책별 평가서로 대치
가. 규제개혁관련 법안의 신속한 공식화 나. 규제개혁관련 하위법령의 적시 처리수준 다. 유사행정규제 정비실적 라. 법령미근거 규제 정비실적	관련 법안의 목록과 소요일수(평균 소요일수 기재) 관련 하위법령의 목록과 소요일수(평균 소요일수 기재)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가. 일선기관에 대한 규제개혁안 통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나. 규제개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조정노력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가. 홍보물 게시 및 전자적 정보공개 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보도실적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가. 국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 나. 규제개혁 관련 국민제안 처리실적 다. 경제사회단체 건의사항 처리 실적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가. 규제개혁 집행상황 평가 실적 나.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가. 규제총량관리를 위한 신설강화규제 억제 노력 나. 핵심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정비 실적 다. 지식정보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 라. 창의적 업무발굴 등 타부처의 수범이 되는 정도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관련 자료(수범사례·실패사례 각 3가지 이상)
가. 규제등록 및 관리실적 나. 규제폐지율 다. 규제개선을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관련 자료

※ 관련 자료는 본문의 주요 실적에 기술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단 본문의 기술만으로 충분히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